

친박·친문 與野 장악... '제3지대론' 급부상

당내 패권주의 강화엔 잠룡들 새판짜기 모색

김종인 '킹 메이커' 자임...국민의당 중도 결집 나서

새누리당이 이정현 대표 등 친박(친 박근혜) 지도부를 구성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 등 친문(친 문재인) 지도부로 출범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양 당의 당내 패권주의가 강화될 경우, 당 내외의 잠룡들이 새로운 판짜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제3당인 국민의당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플랫폼 정당 역할을 내세우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야권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은 어느 한 편에 서기 보다는 야권 재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패권주의 극복=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상수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양당의 지도부가 당내 패권주의를 약화시키면서 잠룡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관측은 비관적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입 등 친박 진영이 주도적으로 대선의 그림을 그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정현 대표가 제의한 서바이벌 방식의 대선 경선 방식은 당내 기득권을 최소화 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 반기문 총장을 영입에 둔 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대에서 나타났듯이 권리당원과 대의원 기반이 강한 문재인 대표에 맞설 주자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라는 등식을 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양 당이 당내 패권주의를 극복

하기는 쉽지 않아 결국 일부 잠룡들이 이탈하거나 장의 세력과 연대를 통해 대선 판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제3지대 정계개편=원래 3당인 국민의당은 '제3지대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중도 개혁 세력이 모여 정권 창출을 이루자는 논리다. 당장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김종필 전 총리 등을 만나 분위기를 잡고 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방법론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다. 당내 주류 세력은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 진영에서는 국민의당의 확대 개편, 더 나아가 '신장개입'을 통해 정권 창출을 이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킹 메이커'를 자임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진영과 잠룡들을 규합, 중간 지대의 정치 세력과 연대를 나설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손학규 전 고문, 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야의 잠

룡들을 잇달아 접촉한 바 있다. 정계복귀 초임기에 들어간 손학규 대표의 행보도 정계개편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지대의 주체 세력이 제 각각인데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순항한다면 정계개편의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호남 민심=제3지대론의 중심에는 호남 민심도 있다. 야권의 최대 기반인 호남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제3지대론 등 정계개편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남 민심의 지지를 담보하지 않고 야권의 대선 승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호남 민심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람을 일으켜 '3당 체제'를 만들고 '여소야대' 정국을 이끄는 등 강력한 정치적 파괴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호남 민심이 더민주의 정권창출 비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계개편론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복귀 임박' 손학규 광주 방문

다음달 2일 '빛고를 문화한마당' 참석...메시지 주목

정계 복귀 초임기에 들어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는다. 최근 강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광주를 찾겠다는 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광주 YMCA 무진관 강당에서 열리는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빛고를 문화한마당'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손학규와 내일을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모임'(손내모)이 주최한다.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손내모가 해남문화원에서 연 행사에도 참석했다. 당시 그는 "이 땅끝 해남에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며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그는 또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고 그 용기를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27 전당대회 직후인 '8월 말·9월 초' 복귀설이 적잖이 나온 만큼 같은 성격의 '광주 행사'에서 진전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계 복귀를 기정사실한 상황에서 더민주나 국민의당 진입 여부, 아니면 당분간 기성정당과 거리를

둔 행보를 할 지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전 대표는 전당대회 날인 지난 27일 강진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회동해 안철수 전 대표와의 경선 제안을 받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HQ(손학규)에게 제가 강조했습니다. '요즘 거론하는 제3지대론은 국민의당입니다. 총선민의로 국민이 결정할 것입니다. 통합 운운도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4지대는 불가능합니다. 제5지대를 하시겠습니까?'라고 올렸다.

안 전 대표도 지난 27일부터 1박 2일간 광주·전남을 방문해 "반드시 정권 교체하라는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제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문호를 활짝 개방해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개혁 세력을 끌어모아 이른바 '대선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난 7월 비슷한 행사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위의 발언이 있었고 이번 장소가 상징성을 담은 광주인 점을 고려하면 또 한 번 선언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며 "내년 대선과 관련한 정계 상황도 손 전 고문의 행보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안으로는 '식사 정치' 밖으로는 '문화 개방'

의원들과 만찬 당내 결속

중간지대 플랫폼론 띄우기

광주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식사를 하며 당내 지지기반 단속에 나선다. 또 밖으로는 '문화개방'을 표방하며 잠룡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투트랙' 행보를 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최근 서울과 경기, 충청, 전남의 지역의원장들을 잇따라 만났던 안 전 대표는 이번 주부터 당 소속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할 계획이다.

이는 대선국면을 앞두고 당내 지지세를 응집하는 동시에 당 밖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론으로 당 내부가 흔들리는 것을 단속하는 효과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8일 광주에서 제3지대론에 대해 "총선 민심이 저력을 세워주셨는데 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총선 민심에 반한다"면서 국민의당 중심의 새 판짜기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새 지도부가 야권 통합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내부 결속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들을 독려,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는 당 밖으로는 문화개방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 및 기초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 강조하며 국민의당 중심의 플랫폼론을 주장하는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주 대전과 광주·전남을 다녀온 데 이어 30일에는 부산에서 기자간담회와 강연을 통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안 전 대표가 부산을 찾으면 이달부터

추석 전까지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을 모두 한 차례씩 방문하게 된다. 안 전 대표는 지방 행보를 통해 격차 해소, 평화통일, 미래 로드맵 등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더 넓고,

더 깊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듬어낼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도 안 전 대표가 정권교체를 이룰 책임자라는 메시지도 한결같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핵잠수함 도입 검토하자"

전·현직 원내대표 등 23명 "北 탄도미사일 대응"

새누리당 전·현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여당 내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4000t급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지만, 일부 언론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중단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이다"며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SLBM 도발을 막으려면 북한 잠수함을 항시 밀착해서 감시해야 하는데,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바닷속에서) 2~3주밖에 작전할 수 없다"면서 "항시 북의 도발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약칭 핵포럼)'도 전날 성명을 통해 핵잠수함의 즉각 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모임은 회장인 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3명의 여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핵잠수함 배치는 국내 핵연료 재처리 승인을 보유한 미국의 의중을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핵 추진 잠수함 원료인 농축 우라늄의 사용은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도 발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